



총학탄핵 관련 전학대회에 부쳐

총학생회는 탄핵될 이유가 전혀 없다

저의가 의심스러운 ‘평화고대’의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

오늘(19일)은 지난 월요일 ‘총학없는 평화고대’가 발의한 총학생회 탄핵안에 대한 전체 학생 총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학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지난 월요일 ‘평화고대’는 총 2353명의 서명을 제출하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많은 학우들이 탄핵안 발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는 놀랐을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탄핵안 발의 서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보수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한 몫 했다. 보수언론들은 진보적 목소리를 내려는 시위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해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시위 학생들을 ‘폭도’, ‘패륜아’로 취급했다.

‘평화고대’는 시위 학생들에 대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보수언론에게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마녀사냥에 동조해 학내에서 시위 학생들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선동하고 다녔다.

‘평화고대’의 선동은 초반에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인문계 캠퍼스에서는 5월 2일 당일 시위를 방어하는 학생들이 ‘폭력’ 왜곡에 대해 반박하는 선전을 진행하자, ‘평화고대’의 주장은 커다란 매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평화고대’는 애초 총학생회 탄핵 요구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사과 요구 서명으로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사과 요구 서명에 탄핵 요구 서명을 은근히 끼워 넣어, 학생들이 이 서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서명에 동참한 학우들조차 일부는 ‘사과

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탄핵안 발의를 할 줄 몰랐다’며 놀랐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이러저러하게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던 학우들이 ‘평화고대’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에 동참했던 것이다. ‘평화고대’의 탄핵안 발의 여부를 묻는 란에 ‘YES’를 표시한 학우들이 진지하게 탄핵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계에 반대하는 서명에 2700명이나 참가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고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가 총학탄핵에 반대했다.

**총학탄핵안이
진정으로 겨냥하는 바**

총학생회에 대한 일부 학우들의 불만 중에는 정당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고대’의 총학생회 탄핵안 제출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므로 탄핵안 가결을 지지해선 안된다. 5월 2일 당일 시위는 총학생회가 주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총학생회장은 참가하지도 않았다. 총학생회와 다함께 등에서 수 차례 이 사실을 밝혔음에도, 저들은 불신임 서명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당일 시위에서 이견회 회장과 학교측은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다쳤다. 그런데 이런 일로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당한다면 그것만큼 어이없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설사 총학생회장이 시위에 참가했고 시위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노동탄압의 주범이 철학박사를 받는 현실에 분개해서 저지하려고 한 것이 탄핵감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진보적 주장과 행동도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평화고대’는

상대방을 전혀 다치게 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다치지도 않은 사소한 충돌은 탄핵사유가 된다며 이렇게도 분개하면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를 쥐도새도 모르게 납치해 살해협박을 하는 어마어마한 폭력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이러한 단순한 사실만 비교해도 이번 시위가 탄핵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최근 고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상주하고 있는 일부 우파 학생들은 당일 시위를 총학생회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한 놈부터 때려잡자”, “총학부터 확실히 잡는 게 순서” (게시판 245591번 글 등)라는 식으로 총학생회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진보적 학생들의 활동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와 같은 우파신문이 총학탄핵안 제출을 그토록 반기는 것이다.

풀뿌리

오늘 전학대회에서 탄핵안 총투표 상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며칠 전부터 기층 과학생회 구성원들을 모두 ‘친(親)총학 운동권’으로 몰아붙이며 전학대회에서 탄핵안 기각시키는 것을 ‘총학 독재’로 딱지 붙이는 선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학대회 구성원들은 우리 학우들의 손으로 뽑은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의 리더들이다. 이들이 진정한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명분 없는 총학 탄핵안을 기각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총학탄핵안이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될 이유가 없다

5월 16일, ‘평화고대’ 측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명분은 5월 2일 시위에 대해 총학생회와 ‘다함께’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분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 건 회의 노동탄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벌어진 사소한 충돌이 탄핵의 사유나 된단 말인가? 오히려 심상정, 최순영, 단병호, 강수돌, 박노자, 손석춘, 김동춘, 홍세화, 교수노조, 민교협, 민



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많은 진보인사/단체들이 학생들의 시위가 아주 정당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고려대 안에서 받은 징계반대 서명에도 18일까지 2770명이 동참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대생의 60%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거 없는 탄핵안은 총투표 상정거리가 못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탄핵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을 탄핵하려면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경우, 총학생회는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명명백백한 잘못을 저지른 바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도 국회가 탄핵할만한 사안도 아닌데 탄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하려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학대회에서 탄핵사유가 정당한지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저런 이유로 총학생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이것이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투표나 총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애초에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자유게시판 등 일각에서는 전학대회가 다 운동권일 것이므로 총투표로 가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이 전학대회에서 부결된다면 그것은 이번 탄핵안이 근거 없기 때문이지, 전학대회가 비민주적이어서가 아니다. 전학대회 대의원은 각 단대/과반학생회의 직선대표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고 검증된 사람들이다. 전학대회 자리는 공개되어 있어서 언론 등이 얼마든지 이를 취재할 수 있다. 이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을 걸고 토론한 후 표결하는 자리를 비민주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순전한 억지다. 다수 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전학대회가 비민주적이라는 식의 생떼를 쓰면 안된다. 학생들이 다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탄핵발의는 전학대회에서 걸러내야 마땅하다. 전학대회 대의원들이 진정한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명분 없는 총학탄핵안을 기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다.